

기업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 ESG 경영	
02차시	ESG 용어와 중소기업 ESG의 현주소

1. ESG 용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가.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국제적 협약으로 ESG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었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2021년 1월부터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선진국에 국한되었으나,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당사국 195개 국가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춘 보편적이며 글로벌 첫 기후위기 대응 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1.5°C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

나. 탄소중립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이산화탄소가 지목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다.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므로 계단 사용을 일상화하자고 계몽하고 있다. 메일 한 통이 탄소 4g을 생성시키므로 불필요한 메일을 삭제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또는 카풀 이용, 일회용품 대신 개인용품 사용,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장바구니 애용 등이 있다.

다.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은 탄소(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해서 나타낸 지표이며,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이다. 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해 생산을 멈출 수 없다.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재료 수입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을 아울러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측정 대상이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환경성적 표지의 환경영향 범주에는 탄소발자국 외에도 자원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생태 독성, 인체 독성, 생물 다양성 영향이 있다.

탄소발자국이란 용어는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의회과학기술처(POS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제품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탄소발자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표시 단위는 킬로그램(kg) 또는 탄소중립을 위해 심어야 하는 나무 수로 표기된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탄소포인트제'이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이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탄소포인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무역관세의 일종이다.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혹은 그 관세를 말한다. 일종의 탄소국경세이다. 본격적 시행시기는 2026년도부터이다. 2025년도까지는 과도기이다. 궁극적으로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량을 국제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탄소가 배출된다. 다만,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는 국가마다 다르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감축 규제가 엄격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예방하려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만들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역수입되는 제품 중에서 유럽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유럽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2026년도부터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

마. 그린 워싱(Green Washing)

한 마디로 표현해서 '위장 환경론자'이다. 실제의 모습은 친환경적 기업과 거리가 있다.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 차원에서 가식적으로 친환경 기업이라고 포장하는 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그린 워싱(green washing)은 환경을 표방하는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1980년대에 생성된 신조어이다. 2020년도부터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주의를 표방하면서 평소 전략보다 다소 부풀려 홍보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친환경 마케팅의 배신이다. 세계적 자산운용사들이 ESG에 기초한 투자를 선언하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 워싱은 다양한 산업에서 교묘하게 발생한다. 제지산업 영위 기업은 재생지 활용으로 벌목과 같은 환경파괴를 축소한다는 친환경 경영을 강조하지만, 이면에는 여전히 벌목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그린워싱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마크'를 시행 중이다.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타 제품에 비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영향이 적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 영향, 저탄소제품 인증 마크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친환경 제품화 전략에 열을 올리는 것은 판매 실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외부기관 평가에 긍정적이며 투자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에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임에 틀림없다.

바. RE100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개념이 단순하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에는 풍력, 태양광, 수력, 지력, 원자력 등이 포함된다. RE100 시발점도 유럽이다. 2014년 영국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비영리 단체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주창했다. RE100은 기업에서는 부담이다. 에너지 설비를 신축하거나 개축해야 하는 등 초기 자본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현실을 도피할 수 없다. 특히, 수출기업은 RE100이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RE100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국제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사.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는 투자 및 산업 활성화와 관계있다. 녹색자금이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녹색분류체계는 그린워싱 방지를 목적으로 2020년 6월 유럽연합(EU) 집행부가 공개한 녹색 분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2022년 2월 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범위를 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30일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녹색부문 64개, 전환부문 5개로 총 69개 경제활동으로 이뤄졌다. 액화천연가스(LNG)는 포함되었으나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된 원자력발전은 제외되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부문 64개는 온실가스 감축(산업, 발전·에너지, 수송, 도시·건물, 농업, 이산화탄소 포집, 연구개발),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자원 순환, 메탄가스 활용), 오염(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생물다양성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전환부문은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 등 총 5개 녹색경제활동으로 이뤄진다.

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는 3대 축(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을 기반으로 5개 영역(인간·지구·번영·평화·파트너십),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서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에 있는 기구이다. 2022년 3월 31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공개초안은 2022년 7월 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2년말 위 2개 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ISSB 공시기준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SG 공시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개 초안에 담은 내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관련 정보 공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 의견 개선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정보제공의 시기·위치(채널)·범위 및 기준 시행시기 등 측면에서 기업 부담요인을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침·예시 제공, 공시 요구사항의 완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의 유연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ESG 채권

ESG 사업만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특수목적채권'이 'ESG채권'이다. ESG채권은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으로 구분된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사업 목적을 위한 채권이다. 사회적채권은 의료, 교육, 주거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2021년말 국내 ESG 채권 발행 잔액은 169조원으로 전체 채권 발행의 7.4%를 차지했다.

카. GRI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지속가능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떠 안고 있는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스스로의 전략과 결의를 담은 보고서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경제, 환경, 사회 등 주제별 영향보고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담고 있다.

타. MSCI ESG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것은 평가가 있다는 의미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은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이다. 1999년도부터 ESG평가를 실시하고 각종 보고서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3개 주제를 주축으로 10개 소주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영역별 주제를 중심으로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총 7개 등급으로 AAA에서 CCC까지로 분류한다.

하.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택소노미(Taxonomy)'는 비재무적 요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EU는 환경부분을 중심으로 녹색활동(green activities)을 규정하는 EU 택소노미를 2020년 6월 발표하면서 논의가 불을 지폈으며, 2022년 2월 소셜 택소노미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7월에는 '지속가능한 금융 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를 발간했다. 2020년 6월 발표한 것은 환경에 국한되었다면, 2022년도에는 사회분야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다. 무엇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반사회적 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함이다. 가장 의미있게 봐야 할 부분은 기업에 노동·인권 보호 감독을 의무화한 공급망 실사의 도입이다.

택소노미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ESG 위상(ESG washing)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재무적 요소 분류기준 제시는 애매모호한 경계선을 없앨 뿐 아니라, 작위적 해석 여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결국 비재무적 요소 분류기준 제시는 과장된 기업활동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지속가능 금융자본의 조달이다. 정확한 기준은 이해관계자가 비교 분석을 통해 올바른 판단과 의견 제시에 도움

을 줌으로써 ESG 증진 활동을 이행하는 친환경적·친사회적 기업은 원활한 금융자본 조달에 용이할 수 있게 도와 준다.

EU 소셜 택소노미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사회목표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사회적 혜택 (additional social benefit)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할 수 있는지, 다른 목표 달성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DNSH, Do No Significant Harm)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첫째, 양질의 일자리 제공(노동자: 가치사슬 포함), 둘째, 최종 사용자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 및 복지 제공(소비자: 최종사용자), 셋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지역사회) 이라는 사회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실현은 아동노동과 노동력 착취와 같은 인권침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노동환경, 차별금지 등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를 따르면서 사회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UN의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중소기업 ESG 현주소

가. 중소기업 ESG 애로사항

1)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급망 ESG 대응현황 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년 3월에 '공급망 ESG 대응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하였다. 조사 목적은 ESG경영과 관련하여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현황 조사를 하고 향후 정책 건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조사는 최근 2년 이내 대기업과 거래하거나 수출 실적 있다고 응답한 62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ESG 평가 요구 경험의 질문에는 '있음'이 20%로서 총 124개사로 나타났다. 있다고 응답한 124개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를 요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석해 봤다.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80.6%', '해외 거래처 28.2%', '정부 공공기관 2.4%'순으로 나타났다. ESG 요구 수준(요구 정보량·평가기준) 추이는 50.8%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박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느끼는 중소기업은 수출경험 중소기업(40.0%)보다 대기업 거래 경험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이 52.3%로 다소 상회함을 알 수 있다. 협력적 관계인 대기업과 ESG는 상생해야 할 이슈라는 것도 조사에서 나타났다.

ESG 평가는 어떤 형태로 요구할까? '국내외 관련 인증 제출'이 46.8%, '평가기관 평가결과 제출'이 45.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응답'이 31.5% 순이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버거울 수 밖에 없는 요구 형태이다. 평가기준은 대기업 중심의 자본이 투자되어야 할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도 부담스럽다. 조직적이며 시스템적으로 ESG를 체계화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소기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기중앙회가 언급한 것처럼 협업 관계에 있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막대한 부담감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공존과 상생이라는 ESG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사의 진정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적자원, 물적자원, 재무자원에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수반되어야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대처할 수 있다.

ESG 요구 기준 공개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대략적인 가이드만을 제공하고 있음'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음'은 26.6% 수준이며 '공개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응답율도 7.3%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ESG 요구 수준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항목에서는 ESG 요구 수준이 '어렵다'가 16.9%로 '충족이 어렵지 않거나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21.0%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통'의 답변은 62.1%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어렵다'고 답한 기업을 종업원수와 매출액으로 분석해 봤다. 먼저 종업원수는 30인 미만이 10.9%인 반면에 100인 이상 중소기업은 21.9%로 종업원수가 많아질수록 ESG 요구 수준을 어렵게 받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50억원 미만은 15.3%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200억 이상은 19.3%로 매출액도 커지면 커질수록 ESG가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SG 요구에 미달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결과는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개선 유도'가 20.2%, '미개선시 거래정지 또는 거래량 감소'가 18.5%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생관계에 있는 거래처 지원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해외 거래처가 '지원사항 전혀 없음'이 64.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약간의 지원은 하고 있으나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이 16.9%, '약간 도움되는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음'이 14.5%로 매출에서는 상생관계이나 ESG 측면에서는 각자도생 수준임을 분석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경영지원 필요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안전장비, 폐수·폐기물·대기오염 처리시설 등 ESG 경영을 위한 제반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이 28.8%로 가장 높았다. 결국 ESG가 대기업만의 잔치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풍부한 자본력과 투자가 수익으로 전환될 때까지 장기간 감내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요구이자 생존과 직결된 것이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ESG 투자와 ESG 소비에서도 이 점을 유념 있게 다루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ESG 현주소는 「걸음마 단계」로 판정할 수 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ESG 요구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한 조직내에서도 정보의 쓸림과 독점이 있듯이 ESG에 대한 정보는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의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으로 대기업에 준하는 ESG 모범기준을 마련하고 외부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대기업이 ESG 경영 수준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성의부족일 수 있고, 반면에 대기업도 담당자 이외에는 아직 ESG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대기업은 협업관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ESG의 경영 요구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다. 평가를 위한 제도 마련보다는 실질적이면서 책임있는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서라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

2021년 6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 모니터링단 1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① ESG 경영에 대한 인지 정도 : 53.3% '알고 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53.3%)이 ESG 경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ESG 경영을 알고 있는 기업 중 '잘 안다'는 12.0%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알고 있다(53.3%)의 80% 수준인 41.3%가 '대충 안다'로 응답한 것을 유추해 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ESG를 돌아 볼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알고 있다'와 유사한 수준인 46.7%는 ESG 경영을 모른다는 것으로 기업 경쟁력과 지속경영을 위해 ESG 이해 도모를 위해 홍보와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도출할 수 있다.

② ESG 경영 준비가 필요하다 : 58.0%

ESG 경영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ESG 경영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다.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ESG 경영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58.0%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SG 경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대부분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ESG 경영의 필요성과 매출액이 비례한다는 것을 조사결과 밝혔다. 필요하지 않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8.7%로 상당 중소기업이 경영 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예시한다.

③ ESG 경영이 매출증가 등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 47.1%

②번 질문에서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한 후속 질문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매출, 이윤증가 등 경영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는 중소기업이 47.1%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기업 이미지 개선(29.3%)', '투자자 관리를 통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9.8%)'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④ ESG 경영 중소기업 규모에 적용하기 부적합 : 50.0%

ESG 경영이 무엇인지도 알고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규모에 ESG를 적용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다. 이 응답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ESG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시설 등을 개보수하거나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평가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담당할 인적자원의 여력 등 현실에 처한 다양한 어려움을 인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⑤ ESG 경영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 : 25.7%

ESG 경영에 관한 중소기업의 현 주소이다.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25.7%에 불과한 수준으로 범 사회적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다소 걸릴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점으로 고려할 때 준비 계획에 있거나 계획조차 없는 7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가도 ESG 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⑥ ESG 전담조직 없음 : 76.3%

준비율이 낮다는 것은 전담조직 또한 없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전담조직이 없다'는 비율이

76.3%로 'ESG 경영준비를 계획하거나 계획조차 없다'는 75.3%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ESG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룰 사안이다. 산업별·매출액별 중소기업 모범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한다면 전담조직까지 갖추어야 할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다.

⑦ ESG 평가 경험 없음 : 92.0%

ESG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경험이 있다'는 8.0%로 대부분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 저탄소·친환경 전환에 대한 요구가 타 업종 대비 높은 금속(15.6%)과 화공(16.0%)이 전체 평균(8.0%)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 즉, 기업의 생사 여탈권과 연결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아울러 ESG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인지할 수 있다.

⑧ ESG 평가 결과가 사업에 긍정적 영향(79.2%), 거래량 확대(73.7%)

비록 평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8% 수준이지만, 평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79.2%는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평가 결과 영향으로는 '거래 조건 개선, 거래량 확대'가 73.7%로 가장 높았고, '해결 후 납품'이 15.8%, '거래량 축소'가 10.5% 순으로 나타났다. 저탄소·친환경과 같이 ESG와 직결된 산업군의 중소기업은 '울며겨자 먹기식'이라도 ESG 경영 도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ESG 경영 실천현황과 취약 부문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인 부문은 사회부문(social)으로 46.6%의 실천율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 비율 또는 직원역량 강화와 같은 근로환경 개선이나 협력사와 공정거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부문 실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장 힘들어 하는 부문이 환경(47.7%)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규모 자본력의 시설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폐기물 감축 등 환경오염 저감' 18.4%, '환경 법규 준수'가 16.7%로 실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공정개선과 설비 도입은 막대한 자본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은행 대출 등 다양한 해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천율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ESG 경영의 조기 정착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은 표와 같다.

구 분	건의 사항
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경영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이자 감면 등 ESG 경영은 중소기업에게 비용부담이 크므로 장기저리 비용 지원
컨 설 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정확한 진단, 컨설팅, 교육 확대, 비용 지원 필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사례 중심) 제시 필요
인력,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경영 전문인력 양성, ESG 경영 인식 강화 교육 ESG 경영 명확한 인센티브(가점, 세제혜택 등) 홍보
세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경영 도입시 세제 등 각종 혜택 지원 ESG 경영 도입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력 10년 이상 기업 대상 지속적 지원 ESG 평가에 대한 계량화 수치화 필요